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3796 지방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9. 11.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10.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238,361,460원 및 지방교육세 47,672,2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강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2. 22. 창원지방법원 2021회합1000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1. 3. 29.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1. 9. 13.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9. 27. 위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채무 59,590,365,000원을 11,918,073주의 신주로 출자전환(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하여 신주를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된 신주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하는 자본감소를 실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1. 9. 27. 회생계획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 1,280,000주를 발행하였다.

다. 창원지방법원은 위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금 증가(신주 발행) 등기와 자본금 감소(무상소각) 등기를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2021. 10. 1. 위와 같은 자본증가의 등기가 마쳐졌으며, 2021. 11. 3.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라. 피고는 2023.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자본금증가 59,590,365,000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323,361,150원(가산세 84,999,690원 포함), 지방교육세 55,137,770원(가산세 7,465,48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4. 8. 26. 지방세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를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원고가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가산세 부분은 모두 취소



하였으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가산세를 제외한 이 사건 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실질과세 원칙 위반

이 사건 출자전환은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함과 동시에 즉시 무상 소각하기로 예정된 절차로, 실질적인 자본금의 증가가 없는 형식적 등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산권 변동이 없는 행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법률 적용의 오류

회생절차에서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지방세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다.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의 오류

지방세법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주금의 납입이 없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자본금 감소의 예와 같이 '그 밖의 등기'로 보아 정액의 등록면허세(건당 40,200원)가 부과되어야 한다.



라. 신뢰보호원칙 위반

법원의 촉탁에 의해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없이 자본금 증가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출자전환과 관련된 등기에 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라 원고의 기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금 증가 등기'가 경료되었다. 이로써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자본금이 증가하였고, 부채가 자본으로 대체되는 권리 변동이 외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자본금 증가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은 이미 충족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원고의 회생채무 등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토대로 후속으



로 이루어진 무상 소각을 통하여 회생채무 등이 실질적으로 면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자전환 직후 무상소각을 통해 자본금이 다시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게 성립한 자본증가 등기를 전제로 하는 별개의 후속 절차일 뿐,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울러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에 대하여 2015. 12. 29.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그 문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률 적용의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과세 여부는 원칙적으로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제1호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등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 자체에 관한 등기와는 달리, 자본의 증가와 같이 실질적인 재산권 변동을 수반하는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히 반영된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의 일반적인 면제 규정보다 구 지방세법의 위 단서 규정이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규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



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는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에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금 외의 출자가액'이란 현물출자나 채권의 출자전환과 같이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경우 그 가액을 의미한다.

이 사건 출자전환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대가로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서 '현금 외의 출자'에 해당한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 변경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2898 판결 참조), 피고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 액면총액(59,590,36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인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나아가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며, 넷째,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견해 표명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창원지방법원의 촉탁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금 증가(신주발행) 등기와 자본금 감소(무상소각)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등기관인 등기국의 직무 집행에 해당할 뿐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비과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주관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 정당성을 지닌 합리적인 신뢰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등기 이후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확고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판사 유○○

판사 김○○



별지

관계 법령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① 제206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부칙 <제19860호, 2023.12.29>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1

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